

정부, 업무개시명령 송달 vs 의료계 “증원피해 결국 국민에”

>> 1면 '4만명 의사·의대생'서 계속

주최측 “의대교육 질 저하 우려 정책 악용, 의사를 노예로 만들어”

정부, 공시 이후에도 명령 거부엔 의료법 따라 처분·형사고발 가능

이들은 “교육여건과 시설 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을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

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기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전임의도 떠난 현장, 의료공백 커져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집단사직으로 먼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절차 역시 곧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공고)’을 시행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 상태다.

이 가운데 전임의들의 사직도 현실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증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대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전임의들은 병원과 재계약 없이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약 의사를 밝힌 전임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 관계자는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힌 전임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임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 남아 1~2년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의사다. 전공의보다 숙련된 의사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전임의들마저 대거 병원을 떠나면 공백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빅5’ 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

은 37%, 전임의 비중은 16%로, 전공의와 전임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공의를 대신하던 전임의마저 병원을 떠나가면 남은 교수들의 피로는 가중되고 수술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1면 '메트로경제와 함께'서 계속

■ 제출서류

- ① 회사 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카페(아랑), 구인 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 간 : 2024년 2월 29일(목) ~ 2024년 3월 29일(금)
-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3월 29일 도착분) 채용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접수 가능
-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년 4월 3일(수)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 2024년 4월 9일(화)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 서울시청 지하 2층 시민청 워크숍룸
- ③ 내용 : 공지하는 취재 주제로 기사 작성하여 제출

· 면접(실무 면접, 임원 면접)

- ① 일자 : 2024년 4월 11일(목)~12일(금)
- ②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③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년 4월 17일(수)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실로 연락바랍니다. ☎ 02-721-9851

오늘 의대증원 신청 마감... 대부분 정원 2배이상 요청할 듯

교육부, 미신청시 증원의사 없음 간주 일부 대학서 총장-의대학장간 갈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발이 격화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가 예정대로 4일 완료될 전망이다. 30여년 만에 이뤄지는 의대 증원 기회를 두고 대학들은 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부분이 기존 정원의 2배 이상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본부에 재차 공문을 보내 4일까지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대학에 발송하고 증원 2000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증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간호학과나 첨단학과 등 정부가 학과 정원 증원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추진하면서 신청하지 않은 곳에 증원해주는 사례는 없었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대부분 대학이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대부분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기한 내 의대 증원 신청을 하는 분위기”라며 “이번에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앞으로 수십년간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일부 지역 대

학은 다소 무리해서 증원 규모를 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정부 계획대로 5058명으로 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된다. 당시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으로 2006년 3058명으로 줄었으며, 이후 올해까지 19년째 동결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증원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

부 대학에서는 총장과 의대 학장 간 갈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본부는 대규모 증원을 희망하지만, 의대 학장들과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정부 수요조사에 답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휴학계 제출 등으로 학사 일정을 거부하는 의대생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대학에는 부담이다.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73%가량이 휴학계를 낸 셈이다. 그러면서 대부분의대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개강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4일 마감되는 2차 조사에서도 대학들이 총 2000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수요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국 의대 보유 40개 대학 대부분이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hj@

을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1410억 투입

산업부, 신규과제 4274억 ‘역대최대’ 2451억 규모 신규과제 1차공고 실시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141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해 신속 집행하는 등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141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과제 예산은 역대 최

대 규모인 4274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2451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4월 1차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먼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GaN)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늄아이드(TiAl)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및 저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개발 등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는 586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는 전년 신규투자(101억원)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대표적으로 희토류 대체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전기차 구동모터용 폐회로자석 재활용 공정기술, 바이오다이올 핵심 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 등 29개 과제에 대한 신규 개발

에 착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 단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에도 신규 545억원을 지원한다.

그간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2023~2030년, 9352억원)’ 등을 통해 철강·시멘트 등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도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사용후 스크랩 재활용 기반 알루미늄 합금 소재화 기술,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그린 섬유 소재 개발 등 29개 과제를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